

복지지출확대와 재정건전성*

박 재 완 (기획재정부 장관)

1.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복지와 건전재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요즘, 한국경제학회에서 “한국경제의 복지지출확대와 재정건전성”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 가난하면 지혜가 위축되지만 유복해지면 마음에 활기를 띠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 ‘인빈지단 복지심령(人貧智短 福至心靈)’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가다듬고 지향해야 할 선진복지국가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 우리나라 복지지출 현황

여러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9.6%('09)로 OECD 회원국 평균('07, 19.3%)의 절

* 본 원고는 2011년도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개최된 제3차 정책세미나(2011. 12. 12(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한국경제의 복지지출확대와 재정건전성」에서의 축사임.

반 수준입니다.

이를 근거로 복지지출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담세능력을 나타내는 구매력 기준(PPP) 국민소득이 OECD 평균의 80%이고, 복지 수요를 대변하는 노인인구비율이 70%인 점에 비추어, 지금의 복지 수준이 OECD평균에 도달하는 적정 균형경로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복지지출 장기전망(조세연, '09.12, GDP대비)

: ('09) 9.6 → ('30) 15.2(미국) → ('40) 18.4(일본) → ('45) 20.1(OECD 평균)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를 통일에 대한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와 관련된 생산적 논의는 바람직합니다만,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복지지출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맞물려 무분별하게 늘어날 경우,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최근의 남유럽 재정위기를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보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나,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편이 더 좋다.”라고 한 비스마르크의 금언처럼, 우리는 선진국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형 복지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3. 우리나라가 지향할 복지정책 방향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는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일하는 복지

첫 번째 정책방향은 ‘일하는 복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들이 겪었던 복지병(welfare disease)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요즘 유럽 국가 중 가장 돋보이는 스웨덴의 경우, 90년대 재정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하는 복지(workfare)를 원칙으로 삼아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도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 스웨덴 경제지표('10): GDP 성장률-5.5%, 재정수지-△0.2%, 국가채무-39.6%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던 영국도 최근 복지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선언하여, 일하

지 않으면 복지수급자에서 제외토록 하고 근로유인을 확대하여 일할수록 혜택이 늘어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어야 합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강화하여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2) 맞춤형 복지

두 번째 방향은 ‘맞춤형 복지’입니다.

한정된 복지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이 여전히 아쉬운 상황에서, 고소득층까지 획일적으로 포괄하는 복지정책은 자칫 서민들을 위한 복지재원만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만, 글로벌 경기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내년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 경제성장률: ('11)3.8%→('12)3.7% / 취업자증감: ('11)40만명→('12)28만명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집니다. 복지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노숙자 등 소외계층에 생활터전을 마련해서 자립을 돕고,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돌봄과 지원도 꾸준히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지속가능한 복지

마지막은 ‘지속가능한 복지’입니다.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도한 복지지출이 가져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인해 이미 도입된(built-in) 제도에 따른 복지지출이 향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국민 부담과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국민부담 및 복지수준,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없이 도입되는 복지제도는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맺음말

여러분, 복지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지지출 확대에만 매몰되어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다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당랑박선(螳螂搏蟬)’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복지지출 수준과 적정 재정부담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튼튼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단초가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